

#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경제위기의 실태와 당면과제



**白 永 勳**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경제학박사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대기업의 몰락과 이에 연이은 하청업체의 도산 등 우리의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감을 맞고 있다.

국가경제력과 국방력은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本誌**에서는 KID원장으로 계신 **白 박사**님께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高見**을 들어 보았다.

**白 박사**님께서 **本稿**에서 국론의 재결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과 이의 추진을 **力說**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一讀**을 기대해 본다. - 편집자 주 -

**10만** 을 훨씬 넘는 대학졸업자의 구직행렬을 보고 우리는 한국경제의 침체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엿볼 수 있다. 세계의 매스컴들은 이 사진을 톱뉴스로 전하면서 마치 한국경제가 몰락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으로 한국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다. 치솟는 외환율과 가속되는 외환위기, 한보사태 이후 줄줄이 쓰러져가는 대기업의 몰락, 하루에도 수십 개씩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들의 모래성, 대외적으로도 누적되어 가는 국제수지적자 속에서 더욱 가중되는 개방화의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의 장벽 등... 이 모든 사태는 분명히 한국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선 느낌이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낡은 시장경제원리를 앞세워 공자왈 맹자왈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토록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산업구조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지경에도 시장원리만을 내세워 속수무책이다. 문민정부 5년간의 결산은 무엇이고 어떤 유산을 다음정권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본질적인 위기의식은 위정자들이 국민과 너무 멀리 있다는 불신에서 오고 있다. 임기말 정권의 특수상황, 정권쟁탈에 휘말리고 있는 정치싸움, 이모든 허무주의 때문에 국민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철저한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하늘높이 치솟고 있고, 과소비가 숨막히는 역사적 과국을 몰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모두 화려한 꿈을 외치고 있지만 누구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

우리 경제는 새로운 역사적 도전에 앞서 새 규범과 진리를 터득하는 산고를 치러야 한다. 새로운 발전단계를 가늠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국론의 분열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정치지도력의 회복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 역량이 포괄적으로 재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 귀결된다.

우리는 지금 정책발상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선진경제』로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국론의 재집결만이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비결이 될 뿐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출 1천억달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모델은 결코 지난날 이룩한 추세치의 단순한 연장으로는 쉽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포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뜻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정책불신과 국가에 대한 믿음의 단절과 깊이 연관돼 있다. 일할 의욕, 투자하려는 마음이 없는 터에 자금지원이 소용없고 기술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정부의 경제운영전략은 총체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고도산업국가로 새로 도약하는 일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다. 경제체질을 개혁하고 산업경쟁력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가용자원의 재편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단력이 앞서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기구면에서도 낭비요소는 허다하게 깔려 있다. 국가예산상의 불요불급한 요인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낭비요소를 안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먼저 정부 스스로에 귀착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정부 스스로가 경제적 도약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현상유지의 시각에서는 이 어려운 고비를 헤어날 수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정권 재창출의 신념을 안고 새로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오늘날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더욱 고질화·체질화 되어가고 있는 낭비와 부조리 요소, 왜곡된 부의 축적과 배분의 불평등, 그리고 합리주의를 이탈한 가치의식 속에서 물질문명의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고도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촉구되는 우리 경제규모와 사회구조의 변화요인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자본주의 문화를 진정코 어떻게 특징짓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처럼 오도된 경제윤리와 허구 속에서 미래산업사회의 구심력을 어떠한 명제로서 후손에게 전승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시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대에 부과된 우리들의 지상과제로 규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역사발전은 자기시대의 절대필요에 따라 생성·성장·도태를 거듭하는 변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이에 순응하느냐 못하느냐는 자기 시대, 즉 존속과 번영의 기반 유무를 결정짓는 기로라 하겠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전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국면은 가중되는 외환위기의 압력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절약에 대한 국가의지를 한층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외환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물자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운동을 위시해서 자원재생 운동의 전개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산품애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경제이념에 입각한 소비자주권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모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국적인 태세를 갖추나가야 할 것이다.

• 新年度 정부예산의 초긴축 운영과 15% 절감 실시 촉구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예산 초긴축조치가 우선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년도 예산의 15%절감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단체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대폭축소와 민간이양은 물론 행정의 과학화, 정보화와 공무원의 합리적 재배치 등 각 분야에 걸친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서 파격적인 예산절감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절약된 예산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지원, SOC투자 등 국가의 총체적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배분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공제기금 등 예산 밖의 각종기금관리 운영을 합리화하고 기금의 일정비율을 낙후되어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최근 외국에서 단행되고 있는 정부기구 대개혁과 같은 과감한 조치(예 : 뉴질랜드, 일본, 영국 등)를 통해서 정보화시

우리의 통상량은 세계 11위이지만 기초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대부분을 대일·대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외국에 의존한 상태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에 대비한 재정구조의 대개편이 단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회계년도말 소나기식 예산집행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중에 균등하게 집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부구매량을 가급적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등 불황기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와 불황기의 구제를 위한 긴급대책 추진

최근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확산으로 이에 관련된 중소하청기업의 파산이 날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파산과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성 어음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안정 임시조치법」의 제정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경영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기업체 부실자산처분 원활화를 위한 조세 감면 특별법 제정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라 경영합리화와 자구책의 일환으로 소유자산 일부를 처분하려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상의 부담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의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기업의 부실 자산처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분할, 퇴출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산업재편성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업 집중의 경제체제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재편성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화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이 전문화와 다양화의 조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혁신을 주요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을 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재편성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은 기술의 독창성과 경영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세계화시대 한국기업의 국제진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간 홀로서기로 소외되었던 경제정책의 핵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성공사례를 교훈 삼아 중견기업육성에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발상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확대, 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 공제제도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중견기업주식의 장외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력집중의 완화를 위해 과감한 기업공개 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분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의제증여와 관련하여 일정범위 내의 법인출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있어서 연 지급 수입기간을 연장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일층 강화하고 특히 상호출자와 지급보증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시정명령권 부여 등.

전문계열화 촉진을 통한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 보완체제를 구축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션산업, 산업미술 등 다양한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육성과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인프라구축의 과감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정부소유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관련기업들의 민영화 참여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이 개별적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중견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대책 확대**

정부는 특별기술공채의 발행 등 중견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금융실명제 보완의 일환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중장기 저리의 기술자금을 대폭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2~3년내에 10조원의 기술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환경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일류기업으

로 변신할 수 있도록 기술투자 세액 공제제도 대폭 확대는 물론 기계, 전자, 과학 등 기술혁신의 고도화가 요청되는 업종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상각제도를 부활, 확대하거나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공업고등학교 등 전문기술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동체제를 통해서 기술인력이 직접 제조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통상량이 세계 11위라 하지만 기초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설비 및 공작기계 등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심지어 반도체 생산설비의 90%를 외국에 의존하는 등 기술력의 대일, 대미 예측으로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미, 대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첨단기술은 첨단기술대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기초기술에 대한 적극 육성과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제를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기술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공업국 중 기초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외국에 의존한 상태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지방공업의 육성**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업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등 제조기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장의 지방 이전, 현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장입지의 확충과 인력확보 등 국가적 차

원에서 여건조성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 SOC 투자가 과감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장입지의 확충과 염가분양 실시

— 농공단지의 경우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필요 (道·農간의 격차로 인한 자연적인 타지역으로의 유출 등)

민간부문의 공장입지 조성도 장려하여 민간조성공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SOC 투자를 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수립**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장의 가장 심각한 애로는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에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긴 안목에서 볼 때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산업인력난의 해법은 거국적 차원에서 국내적 대책으로 타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병역법을 개정하여 전체의 잉여 병역인력이 산업인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인력 우대와 장인정신 존중 등 기능인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예 : 대학진학 우대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사교육비 절감대책 시급히 강구**

근로자의 봉급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절감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생활자의 가장 큰 가계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며, 이런 청탁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모 대기업 부장급의 경우 연봉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교육 열의가 결코 작지않은 생산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하여 급여인상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고비용의 인건비 지출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기업인의 의식구조 개혁과 경제단체의 활성화**

오늘의 경제위기는 궁극적으로 기업인의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각급 경제단체는 기업인의 의식구조 혁신을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참신한 기업이 정신과 올바른 기업윤리의 정립을 통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새롭게 다져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해 공장입지의 확충과 인력확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여건조성을 마련하는 동시에 SOC 투자가 과감하게 선행되어야 한다